

지방 농정 관련 소식

○ 전라남도 보성군 '100원 택시'의 행복

- 이낙연 전남지사가 공약했던 '100원 택시'가 22일 전남 보성군에서 '행복택시'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음. 이 택시는 득량면 예당6리 진천마을과 4km 떨어진 예당리를 왕복 운행하는 것임. 주민들은 "예당리에 있는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던 분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환영
- 이 택시는 한 차례 운행할 때마다 주민들로부터 1,200원을 받음. 이는 800m 떨어진 승강장까지 간 뒤에 버스를 탔을 때 내는 비용과 같음. 예전에는 택시를 타면 7000원을 내야 했지만, 네 명이 같이 타면 한 사람에 300원씩이어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임
- 보성군은 이날부터 득량면 진천마을을 비롯해 8개 읍면의 마을 16곳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음.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 지역을 36개 마을로 확대하면 이용자가 현재 479명에서 1,469명으로 늘어나게 됨. 군은 마을로 들어가는 버스 노선이 없고 승강장에서 1km 떨어진 곳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했음
- 보성군청은 "마을과 계약한 택시는 한달분을 정산해 다음 달에 차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 보조금은 군이 70%, 도가 30%를 낸다. 내년에는 절반씩 내게 된다"고 설명함
- 전라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 재정 여건에 맞게 기본요금을 자유롭게 책정하도록 했음. 내년에 확대 시행을 할 때는 희망 시·군에 5천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해 요금을 100원으로 책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임
- 전라남도는 올해 안에 보성·화순에서 '100원 택시'의 시동을 걸고,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 11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음

○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적용 사례

- (사례 1) 2012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등록해 군복무를 대체하던 프로그래머 A씨는 게임대회에서의 활약상을 본인의 SNS에 올렸다가 병무청 담당자에게 적발돼 자격이 박탈됐음. A씨는 현재 육군에서 현역병으로 복무중
- (사례 2) 한우 분야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등록했던 B씨는 실제 치킨 배달을 하고 있었음. B씨는 지방 병무청 담당자의 추적과 잠복근무를 통해 불법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돼 편입이 취소되었음
-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후계농어업경영인 복무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허위로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등록해 군복무를 대체하다가 4명이 편입 취소되며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근무기간중 연락이 두절되거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복무연장 처분을 받은 사람도 있었음

-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이란 지자체장이 영농기반, 경력,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선발되는 인원으로서 농어업 종사를 통해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임. 매년 400~500명의 후계농어업경영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으며 올 9월 현재 378명이 복무중임
-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악용되는 이유는 실태관리 담당자의 부족에 있었음. 전국 13개 지방병무청에 복무실태를 관리하는 담당자는 고작 1명만 배정돼 있었음. 이들은 일반 산업기능요원부터 전문연구요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복무실태를 점검하는데, 혼자서 1천명이 넘는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던 것임
- 후계농어업경영인의 복무관리는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월 1회, 그리고 관할 지방병무청에서는 연 1회 사업장에 방문해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있음. 문제는 타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과 달리 개인 농장에서 농어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 일일이 현장에 방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임
- 이에 정 의원은 "후계농어업경영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일하는 후계농어업경영인과 국군장병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발과정에 서부터 근무기간 동안 부정행위가 통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농연 지역연합회 소식

○ 영덕군연합회, 신규 원전 유치 관련 청원 제출...10월 16일 이희진 군수와 간담회를 통해 논의

- 영덕군연합회(회장 권순관)는 "신규 원전 유치와 관련해 전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청원을 했는데, 이에 대해 최근 영덕군이 토론회를 준비중이라고 답변을 해왔다"고 10월 16일 밝혔다
- 영덕군연합회가 9월 24일 영덕군과 군의회에 사실상 원전 유치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한 것인데, 영덕군은 일단 주민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이희진 영덕군수는 16일 한농연을 포함한 관내 농업인단체들과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 농정 현안은 물론 원전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군수는 기존 이뤄진 행정도 존중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며 원전 유치 여부로 군민 화합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음
- 한편 영덕군의회는 이번 영덕군연합회의 청원에 11월 행정사무감사시 군과 협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음

○ 농업인교류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농업인법률학교" 문의

- 070-7165-0013 오준호 대리에게 전화를 주십시오!